

| 주제발표 2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전략

2020.05.12.

서울연구원

CONTENTS

1. 소상공인 분야
2. 산업 분야
3. 일자리 분야

Part.1 소상공인 분야

포스트코로나, 소상공인 보호와 생존권 보장

○ 임차료와 인건비는 경기회복 가시화까지 소상공인에 큰 부담

- 임차료(170.2만원/월)와 인건비(378.4만원/월)는 전체 운영비용의 74.6%



○ 금융지원 정책은 집행기관 별로 상이, 소상공인들 혼란 가중

- 초저금리 긴급대출은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상품과 담당기관이 상이
- 신속하고 효율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기관별, 대상별로 대출조건, 내용 등을 단순화 필요

○ 세금 지출도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

-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영세사업체(5인 이하)를 대상으로 지방세 경감 확대
-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유지에 초점을 맞추어 소득세, 재산세 탄력적인 감면

공공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

- 공공의 적극적 시장개입으로 '상생협약체'를 구성, 착한 임대인 운동 확대

주요 상권별 자치구를 중심으로 '상생협약체' 구성, 임차료 경감을 위한 공공의 역할 증대

- 제도적 토대 마련, 한계소상공인의 '감액청구권' 항시 중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조정위원회' 설치로 임대인, 임차인 간 신속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중재

- 정책자금의 접근성과 집행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

정책자금 지원 내용을 정비하고 제2금융권도 일정 부분 정책금융기관 역할이 가능하도록 조치

- 市 차원에서 재난극복을 위한 '지방세 인하 가이드라인' 마련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세제감면위원회'를 설치, 관련 조례 개정과 효율적으로 감면 조치 집행

추진사업1. 공공의 역할 강화로 임대료 부담 경감

- 주요 상권별로 임대인, 임차인을 주축으로 **상생협의체**와 **‘임차료 감액 조정 위원회’**를 설치
 - 시 차원에서 **‘임차료 감액 조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생협의체’**의 협의 내용을 조정하고 지원
 -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임대료 인하(6개월간 20~30%)시, 건물주 **재산세 감면 기간 및 인하율 확대**
- **‘감액청구권’**을 통한 임대인·임차인 간 협의조정 절차 개선, **‘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도장치 마련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상에 ‘...경제사정의 변동으로...’의 내용 구체화하여 **재난 시 한시적으로 임대료 인하, 계약변동 등의 내용 개정**
 - 한계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감액청구권 청구 도움 센터’**를 설치하여 공공의 행정적 지원 마련

추진사업2. 금융지원내용 단일화 및 연체료 면제 확대

○ 정책금융지원 프로그램 내용과 창구를 단순화하고 전 금융권으로 확대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지원 내용, 지원 접수창구를 한 가지 유형으로 단일화
- 제2금융권(저축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에서도 정책자금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업무 분담

○ 피해 입증이 가능한 소상공인들에게는 타 대출의 연체료가 면제될 수 있도록 권고

- 코로나19로 피해가 입증된 소상공인에게 연체이자 면제 등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타 금융기관으로 확대 권고
- 한계 소상공인들이 많이 찾는 제2금융권의 대출도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금리 인하 등의 조치가 의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추진사업3. 영세소상공인 대상 지방세 감면 확대

○ 국가재난 사태에 대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한 ‘지방세조례감면’ 시행

- 코로나19가 2~3년간 주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 소상공인의 매출액과 임대료 관련 지방세 감면 시행

○ 지방소득세와 재산세를 중심으로 한시적 지방세 감면 확대

- 코로나19로 매출액이 50%이상 급감한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향후 2~3년간 한시적으로 지방소득세 50% 인하
- 착한임대인 사업에 동참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6개월이상 임대료를 20~30% 인하한 경우 향후 2~3년간 재산세 10~50% 인하

Part.2 산업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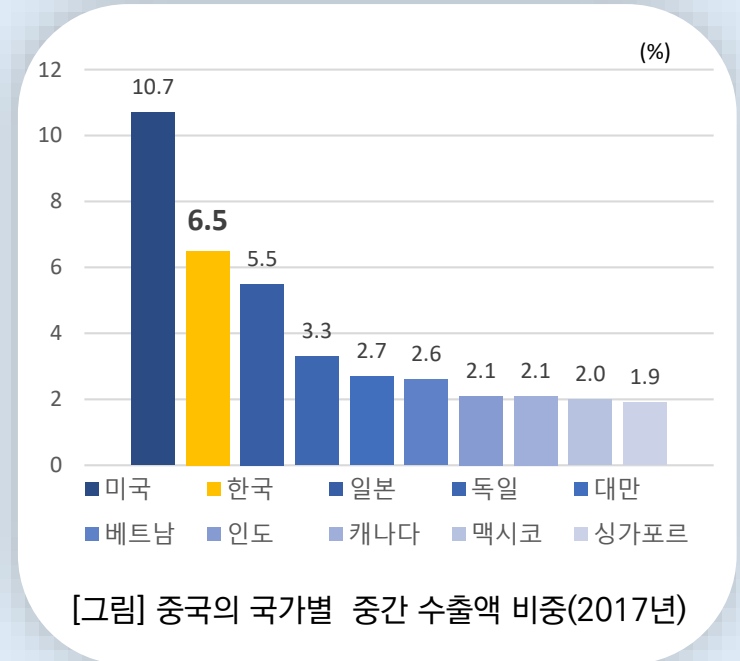
코로나 19 이후 산업 패러다임 변화 가속화

○ 글로벌 밸류체인 붕괴로 생산시스템 약화

- 글로벌 밸류체인 중심에 있던 **중국의 공급망 충격**으로
세계 각국은 자국 기업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 재검토** 시작
 - 일본의 경우 코로나19 긴급 경제대책에서 해외공장의
국내 복귀 지원 등을 통해 기업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를
축소할 방침

○ 경제 및 산업부문의 디지털 전환 추세 가속화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이미 스마트워크 및 스마트공장 시스템 가동, O2O 확산 등 디지털 전환 가속화
-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수록 **디지털 전환 교육수요 확대**
 -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 기존 직업 소멸, 새로운 직업 출현 등 직업구조 전환과 노동 수요 변화
- 디지털 전환 등 **산업생태계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약한 업종이나 계층의 어려움 가중**
 - 노동집약적 업종이나 저숙련 근로자의 경우 대응력 부족으로 일자리 소멸



패러다임 전환에 맞춘 산업생태계 혁신

○ 외부충격에 대한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밸류체인 강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국내외 공급망 충격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

서울 밖으로 이전했던 중소기업이 **서울에 다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 6대 융합 신산업 육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선도 핵심산업과 기술의 경쟁력 강화

서울은 현재 주요 거점별로 6대 융합 신산업 육성 추진 중

☞ 이들 산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추적 역할 수행

- 홍릉(바이오·의료), 마곡(R&D), G밸리(IoT), 양재개포(R&D, AI, 빅데이터), 마포·여의도(블록체인, 핀테크), DMC(문화콘텐츠)

○ 도심제조업, 소상공인 등을 디지털 전환에 적극 동참시킴

도심제조업, 소상공인들은 혁신역량, 자금, 정보 및 인식 부족 등으로 디지털 전환에 소극적

최근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O2O 사업 성장은 서울 도소매업의 물리적, 구조적 변화 초래

☞ 기존 상권의 해체와 재집적으로 이어질 가능성

- O2O(Online-To-Offline):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

추진사업1.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밸류체인 강화

○ 원부자재 공급망 다변화 및 고도화 지원

- 서울 소재 주요 업종별로 협회 등과 협력해 중소기업들의 소재 및 부품 조달 공급망 점검 등 ‘공급망 관리 (SCM ; Supply Chain Management)’ 추진
- 이를 통해 애로사항 청취 등 수요자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 기업의 ‘업무 연속성 계획(BCP ; Business Continuity Plan)’ 수립 독려 등 기존 공급망 약점을 보완하는 시스템 구축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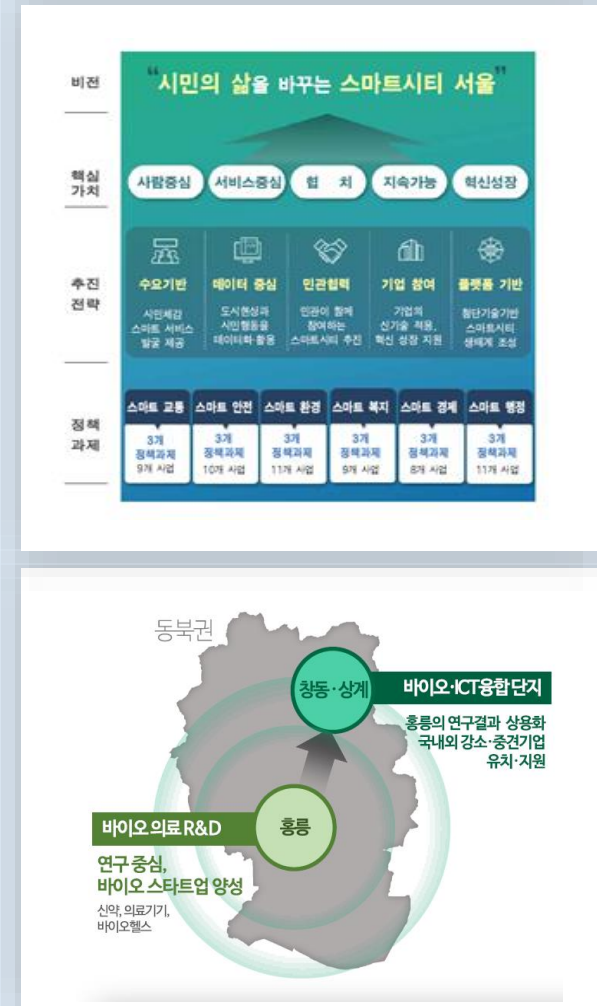
○ 중소기업의 리쇼어링(reshoring) 지원 강화

- 최근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자국기업 리쇼어링 강화 대책 흐름에 맞추어 기존 대책 강화를 중앙정부에 건의
 - 현재 리쇼어링 지원대상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제외 ☞ 서울 등 수도권으로 확대
- 세수체계를 고려할 때 세제혜택과 재정지원은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지자체는 입지 등 지역정보 제공 및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
 - 업종별 협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유치활동 전개, 입지 관련 정보 및 공간, 이전 관련 컨설팅 등 지원
 - 기업유치 담당 부서와 SBA 등이 협력해 리쇼어링 지원방안을 기획·추진하고, 대학 및 연구소 등과 산학연 간 협업체계를 구성해 유턴기업의 정착기반 강화

추진사업2. 서울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 스마트 신산업의 지속적 육성과 전사적 관리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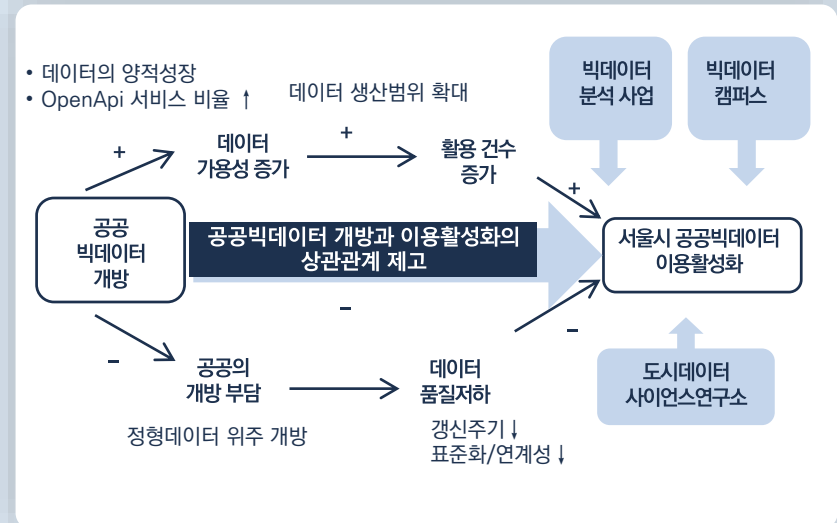
- **6대 융합 신산업**은 개별적 육성보다 **“융합적 관점”**에서 협력해 진행하고, ‘스마트 도시 서울’ 추진에 이들 산업과 기술을 적극 연계 및 활용
 - 6대 융합 신산업의 경우 개별 부서 단위와 더불어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 관리
 - 전담부서는 자원 배분 및 진행 속도, 애로사항, 관련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일종의 허브 역할 수행
- 또한, 코로나19 이후 중요성이 부각된 **바이오 관련 클러스터**와 **엔택트 이코노미 관련 산업 육성**
 - 홍릉에 이어 창동·상계 일대를 글로벌 바이오·ICT 융합단지로 조성하고 홍릉과 유기적 연계 강화
 - 바이오기업 성장주기별 맞춤형 투자를 위한 단계별 펀드 조성
 - 바이오헬스 분야 유망기술 보유기업의 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화 R&D 지원 확대와 바이오헬스케어 특화 테스트베드 추진
 - 또한, 비즈니스 초기 단계인 온라인 교육 및 비디오 컨퍼런스, 재택근무 관련 소프트웨어, 인터넷 의료산업 등 엔택트 이코노미 관련 산업 육성



추진사업2. 서울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 공공 빅데이터의 양적·질적 수준 제고

- 민간 빅데이터는 소수 기업 독점, 공공 빅데이터는 스타트업 등을 통해 산업생태계 다양성 촉진
- 에너지, 헬스케어, 재정·금융 등으로 빅데이터의 생산 범위 확대
- 데이터 개방의 저변을 정형데이터 위주에서 향후 부가가치 증가가 예상되는 **반정형·비정형으로 확대**
- 빅데이터 생산은 공공주도에서 현장 등 수요자를 포함해 양방향에서 접근하고, 생산된 빅데이터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품질 관리
 - 데이터 서비스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서울디지털재단 산하에 **가칭 '빅데이터진흥본부'**를 설치해 공공빅데이터 서비스, 공공빅데이터 발굴 및 품질관리 등 업무 전담



추진사업2. 서울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 도시제조업의 스마트화·디지털화 추진

- 스마트팩토리 실현의 도구인 **산업인터넷 육성**을 통해 **도시제조**

업의 스마트화·디지털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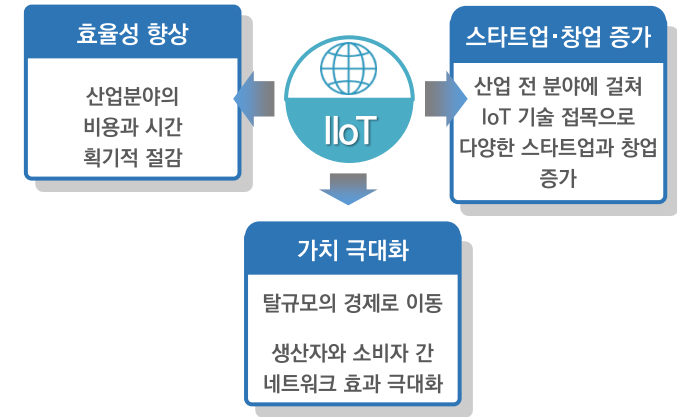
- 산업인터넷은(IloT ;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수단으로 하여 생산과 서비스 등 기업의 모든 기능을 포함한 **산업 제조의 디지털화와 스마트 연결을 진행**
- 산업인터넷은 코로나19 등과 같은 위기 대응 뿐만 아니라 뉴노멀 시대에 기업의 회복력 및 성장에 유효(맥킨지)

- 산업인터넷 **육성정책**은 플랫폼 및 표준화, 데이터 관리, R&D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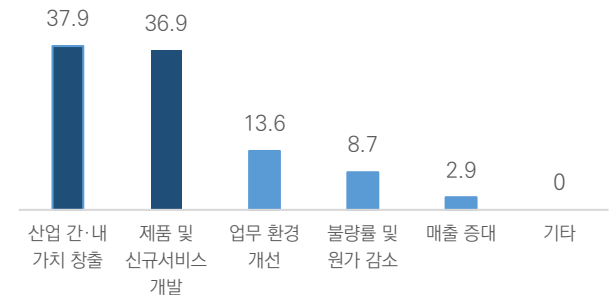
분야별로 구분해 추진

- 플랫폼 및 표준화 분야: 공공영역에서 산업인터넷 관련 플랫폼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 데이터 관리 분야: 공공에서 활용가능한 빅데이터를 수집 및 제공하고, IoT 관련 정보요청 및 정보공유 창구 개통
- R&D 분야: 스타트업이나 규모가 작은 기업이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어 테스트 할 수 있을 정도의 공공 클라우드 서버 구축
- 지원산업의 내실화와 협업 분야: 제품 인증 절차화 사업화를 돕고,

스타트업과 제조사 매칭 등 협업체계 구축



산업인터넷 성공적 정착에 따른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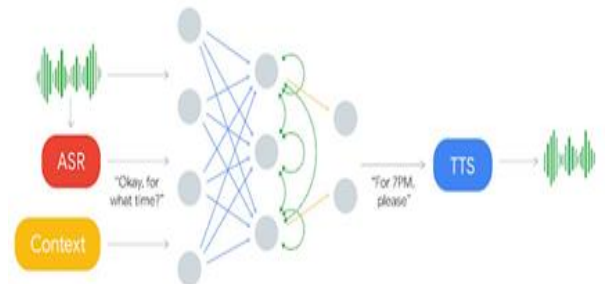
※ 서울시 사물인터넷 기업 103개 대상

추진사업2. 서울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 다대면 오프라인 소상공인 밀집 업종의 O2O플랫폼 구축 지원

- 서비스 부문 중소기업인을 위한 **디지털 솔루션** 지원
 - 군산시 공공배달 앱 '배달의 명수'와 같은 배달 서비스와 더불어 구글의 '듀플렉스(Duplex)'와 같은 **마케팅 지원** 및 주문, 고객 응대 등 중소기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솔루션 지원방안 강구
- 중소기업체를 위한 **O2O플랫폼** 구축
 - 서울제조업 O2O플랫폼은 온라인 매칭과 오프라인 매칭이 상호 연계되도록 설계 및 운영
 - 유망 아이디어는 서울시에서 공모과정 등을 통해 적극 지원
 - 온라인 매칭에서 생산 희망자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등록하고, 이에 대해 창의적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고, 이 과정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기존 생산업체와 서비스 업체 등도 조언
 - 오프라인 플랫폼은 평가를 마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제작을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에 산재한 업체들을 연계해 개발을 지원하는 개발전문회사를 결합해 운영

듀플렉스의 워크플로우



출처: SKT INSIGHT(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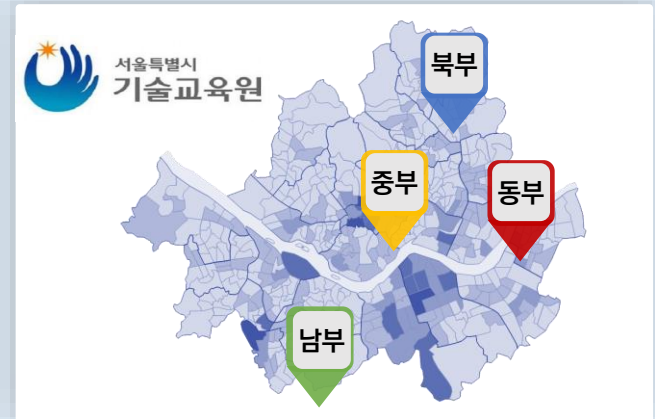


출처: 스마트PC사랑

추진사업3. 업종별 디지털 전환교육 등 노동자 전환 지원

○ 시 산하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점검 및 업그레이드

- 기술교육원 등 산하 교육훈련 기관의 기존 교육·훈련 프로그램 역량과 필요분야의 미스매치 현황 파악
- 기관별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중복을 피하고 권역특성을 반영해 특화
 - 4대 기술교육원 특성과 6대 융합 신산업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
 - 교육 시 기존 교수진 외에 외래교수 형식으로 민간전문가 적극 활용



○ 소셜러닝 플랫폼 구축을 통한 디지털 전환 교육 실시

- 디지털 전환 관련 기본 기술 및 지식을 MOOC 기반 소셜러닝 플랫폼을 구축해 실시
 - 기본 교육에 초점을 두어 산하 기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차별화
- 도시제조업분야의 Digital Meister e-트레이닝 사업 추진
 - 특화 기술 전수를 위한 도시제조업 분야 조사 및 숙련형 장인 선정
 - 타깃분야 콘텐츠 작성 및 기술 숙련을 위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한 증강현실 등 융합화 추진

가상 훈련을 통한 노하우 교육



디자인 과정 기술 고도화



기계 제조업 분야 기술 숙련



의류 봉제 산업 기술 고도화



Part.3 일자리 분야

노동 취약계층의 고용 충격 완화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코로나19 사태로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의 취약성 드러나

- 전국 3월 기준 구직급여 수혜금액은 8,982억 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운 지난 2월 금액(7,819억 원)을 한 달 만에 경신
- 코로나19의 여파 본격화하면서 고용보험 안전망이 확대 가동되었지만,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지원에 한계

○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의 보조적 역할-지역형 모델 필요

-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은 자원 문제, 제도 설계 등의 문제로 국가 전체에 단시간 내 도입 어려움
- 지역형 모델로 도입하여 고용보험 제도의 보조적 역할 및 지역 차원의 선도적 모델 제시

○ 코로나19발 소득 감소로 근로빈곤층 편입 규모 증가

- ILO(2020)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활동 위축에 따른 소득 감소는 빈곤선 근처 또는 미만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2020년 추정치에 비해 근로빈곤층이 2,010만 명에서 3,5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위한 중·장기적 대책과 단계적 추진 필요

○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지역적 차원에서 보완, 목적에 따른 지원 체계 구축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서울시 주민의 규모 및 소득 수준을 파악

구직수당 지급, 교육 훈련비 지원,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직업 상담 등 **맞춤형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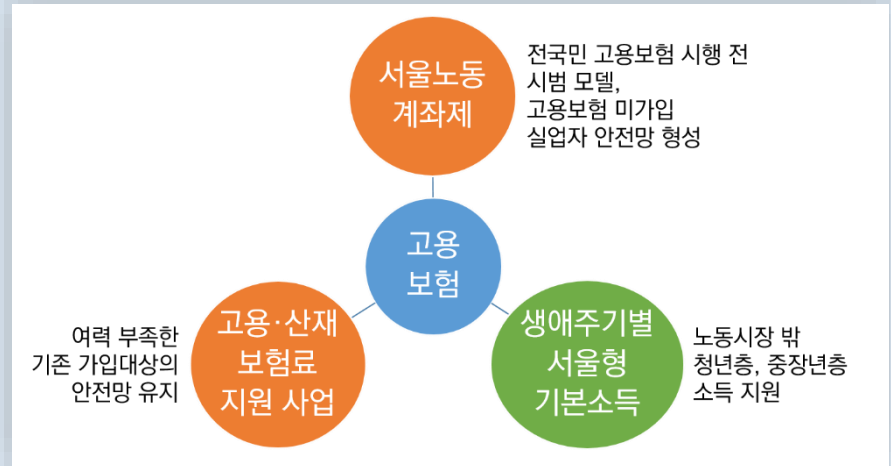
○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보험료 직접 지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을 통해

기존 가입자의 고용 및 노동안전을 유지하고

미가입자를 사회안전망으로 이끌도록 조치



○ 감염병 확산에 따른 새로운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은 복지분야로 통합

감염병 위험에 의한 경제활동 위축 및 건강 문제 등의 취약 계층은 새로운 사회안전망 모델로 포괄 지원

장기적 사회보장체계 개선으로 노동시장 밖 청년층, 중장년층에게 생애주기별 **서울형 기본소득 지급**

추진사업1.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 전 마중물 역할, '서울노동계좌제' 도입

○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시행 전까지 **한시적으로** 고용보험 혜택 제공하기 위한 **시범모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에게 고용보험 보조 역할
 - 서울시 거주자이면서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노무제공자 대상
 -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시행 후 고용보험제도로 편입되기까지 고용안전망 보조적 지원
- 고용보험과 같이 **노동자와 서울시가 가입료를 부담**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실업 시 생계안정자금 일부 지원**
 - 고용보험에서 사업주와 노동자가 각각 부담하는 방식을 차용, **종속성이 분명하지 않은 노동자이므로 사업주의 부과 책임을 서울시가 대신함**
 - 실업급여 신청 시와 같이 **구직의사 전제**(구직활동 증빙 제출) 필요
- 현재 단계에서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대상으로 자격 제한하고, **소득 및 자산기준 적용 필요**
 - 고용보험 비대상 증빙, 개인과의 용역계약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 '서울시 고용보험 **미가입 노무제공자 대상 실태조사**' 시행하고 결과 연계하여 기준 구체화
 -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 파악, 지원 범위 설정,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른 납입액 설정, 객관적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대안 마련
- 교육 훈련,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직업 상담 등 지원 방법 다양화, **맞춤형 고용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추진사업2.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확대 방지 위한 고용·산재보험 직접 지원

○ 고용 불안 및 산재 위험으로부터 생활 보장되도록 고용·산재보험 기 가입 유지, 신규 가입 유도 조치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 가입 노동자의 이탈을 막는 **사회안전망 유지 지원**
 - 두루누리 지원사업 및 고용·산재보험료 일부 지원 사업의 비대상자이면서 기존 4대 보험가입자 중에서 심각단계 발령 이후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10인 미만 사업장(서울시 소재)의 사업주와 노동자(서울시 거주자) 또는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최근 3개월 평균보다 감소한 자
 - 노무제공 중단 일수, 또는 소득 감소 비율에 따라 금액, 기간 차등 지원
- 의무가입이 아닌 **미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에 편입 유도**
 - 사업장의 규모 등에 따라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장의 노동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적용특례에 해당하지만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또는 50명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은 9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건설기계자차 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전속 쿠팡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 기사)의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
 - 조업 또는 노무제공 중단 일수, 또는 소득 감소 비율에 따라 금액, 기간 차등 지원



추진사업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확대와 감염병 피해에 대한 긴급 지원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확대로 근로빈곤층을 적극 흡수, 자녀가구의 부양의무 부담 경감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노인빈곤층 흡수: 75세 이상 노인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예정
- 현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80%가 노인으로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미흡
- 근로능력 판정 기준 개선 및 근로가구에 대한 지원기간 확대

○ 서울시 유급병가를 확대하여 아프면 3~4일 쉴 수 있도록 보장

- 대부분의 국가들은 상병수당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상병수당이 도입되지 않음
- 상병수당과 유사한 제도인 서울시 유급병가를 감염으로 의심되어 휴업, 병가 중인 자로 지원대상 확대
- 특히, 임시·일용직, 프리랜서 등 불안정 근로자들에게 우선 적용하고, 점차 확대

○ 장기적 사회보장체계 개선과 생애주기별 서울형 기본소득 도입

- 청년층,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중·장년층에 기본소득 지급

감사합니다